“반갑긴 한데 6% 이자 큰 부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지역 대학가 반응 냉랭

“동결 대학 느는 판에 …”등록금 인상 상한제 오히려 毒

올 1학기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대학과 대학생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년간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온 일부 지역 대학들은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한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의 자율권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등록금의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학생들은 상환 시점보다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는 되레 독”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으로 등록금 책정을 규제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부의 대학 선진·자율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조선대 한 관계자는 “지역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 경제여건에 따라 인상폭을 조절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으로 1.5배 이상 인상 금지 등의 조항을 못박아 놓으면 내년부턴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등록금 인상은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재원 마련 목적도 있는 데 이를 일괄 통제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경우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사업 예산 등을 종합해 등록금인상률을 결정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은 최소 반영을 원칙으로 해 왔다는 게 대학들의 설명이다. 특히 경제난이 심각할 경우 등록금을 동결한 뒤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3~8% 정도 인상해 왔지만, 등록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되면 매년 동결없이 (연평균 물가 상승률 3% 가정) 4.5%이내에서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생들도 등록금 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책정에 관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선 반겼으나, 1.5배로 상한을 둔 건 등록금 인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학생들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제도 도입을”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서정환 조선대 총학생회 부회장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학생들에겐 크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면서 “등록금은 언제 갚느냐는 시점 문제보다는 인하를 기본 뼈대로 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승용 전남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특히 이율 6%에 복리가 문제다. 재학중에도 이자를 붙이고, 사회 초년생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은 대체로 “학생의 선택 폭이 넓어진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대출을 희망하는 대학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9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하며,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학자금 포털 사이트(studentloan.go.kr)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 신청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설연휴 열차표 예매 행렬 코레일이 설(2월 14일) 연휴를 앞두고 14일 실시한 KTX와 열차표 예매에서 연휴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광주역 대합실에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날 전국적으로 실시한 인터넷·창구예매(4만 1천 매)는 시작한 지 10분 만에 끝났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인공어초 10억 비리

해경, 건설사 대표·공무원 등 36명 입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4일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거액의 공사비 차액을 챙긴 C건설 대표 이모(51)씨 등 건설업체 대표 6명과 하도급업체인 G건설 대표 최모(59)씨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또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양모(48)씨 등 전남도청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36명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C건설 등은 2008년 완도군 인공어초 공사를 3억6천만원에 수주받아 무자격업체인 G건설에 2억2천만원에 하도급을 준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공사 9건을 통해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G건설은 전문 수중공사업체로 등록돼 인공어초 시설을 설치만 할 수 있는데도 원청업체들은 전남도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발주한 공사를 따낸 뒤 제작과 설치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씨 등 전남도 공무원 3명은 원청업체 5개 업체가 무자격업체인 G건설에 일괄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공무원 가운데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업체들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향일암 화재 원인 ‘오리무중’

국과수 “발화지점 등 알수없다” 감정결과 통보

2010년 새해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발생한 여수 향일암 화재의 원인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여수경찰은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향일암 화재의 발화지점과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방화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2~3년 동안 전국 사찰에서 일어난 화재사고와의 관련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과수는 대웅전 지붕과 벽이 무너진데다 내부와 목재바닥이 심하게 타 발화지점을 판단하기 어렵고 화재원인도 촛불, 불꽃 등에 의한 발화로 추정될 뿐 잔류물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경찰에 전했다.

방화 가능성을 조사한 경찰은 기지국 내 통화자 127명, 우범자 77명, 방화전과자 12명, 전국 사찰 또는 문화재 방화 우범자 40명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향일암 주변 숙박업소 투숙객 46명, 종교단체 6곳, 지적장애인 67명과 화재 발생을 전후로 향일암과 돌산대교를 오간 차량 800여대를 상대로도 수사했지만 용의점을 발견하지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2~3년 동안 전국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자료를 입수해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초등생 성폭행 10년 ‘중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준호)는 14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1999년부터 10년간 총 6차례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이 높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함께 잠자다 선배 여친에 못된짓

쌍나팔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선배 등 3명과 모텔에서 잠을 자던 중 선배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못된’ 후배가 경찰서행.

○…1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대학에 재학 중인 K(23)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A모텔 4층 객실에서 선배 L(24)씨와 L씨의 여자친구 P(23) 씨 등 3명과 잠을 자던 중 P씨의 옷을 벗긴 뒤 성추행 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이날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L씨 등과 술을 마신 뒤 L씨가 잠이 들자 P씨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0억대 교비 횡령 목포 S학원 이사장 영장

행정실직원 등 10명 입건

목포경찰은 14일 10억원대 교비를 빼돌린 학교법인 S학원 이사장 박모(여·66)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법인 산하 S고 행정실 직원 이모(35)씨, 이 학교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8개 건설업체 대표 8명과 직원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아들이자 이 법인 상무인 이모(40)씨와 함께 지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교비 11억9천여만원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학교 운영비(4억6천여만원)와 급식비(1억9천여만원)는 물론, 감사원 적발 변상금(3억6천여만원), 기초수급자 자녀 수업료 환급금(8천여만원)까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모자가 횡령한 돈이 더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횡령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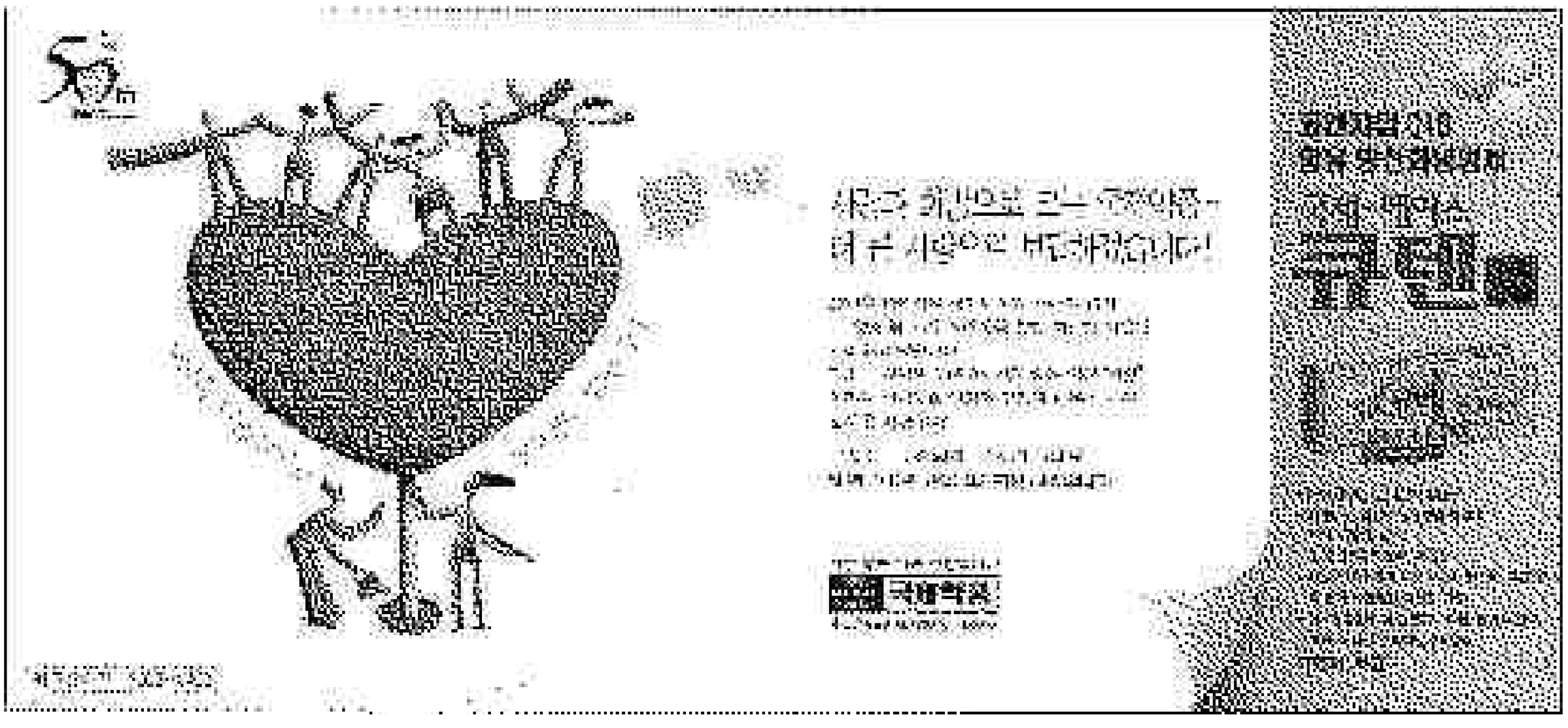
공사현장 공갈 부당이득

前 일간지 기자 둘 구속

광주지검 수사과는 14일 공사현장의 잘못을 트집잡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광주·전남 일간지 전 기자 정모(43)씨와 또 다른 일간지 전 기자 송모(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7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보성군의 모 페인트 업체 사무실에서 한 건설사 대표를 협박해 1천400만원 규모의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받는 등 6차례에 걸쳐 1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전문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공사 현장의 일조권과 소음 등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경찰서와 군립미술관 등 5건의 관급공사를 하청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씨는 2007년 5월께 광주시 광산구 한 고속도로공사 현장 사무실 관계자에게 환경 관련 책자 구매를 강요해 15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책을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송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최근 사직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